

오리 제외 전 축종 하락세 여전... 수급조절 힘써야

오리를 제외한 전 축종이 연말까지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우의 경우 추석경기로 반짝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양돈의 경우 9월 중 3천원대 이하로 하락하고 육계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리의 경우 연초 극심한 수급불안으로 업계 자발적으로 벌인 수급조절의 효과로 인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4분기 축산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중략)

>>오리

거의 전 축종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오리의 경우 지난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업계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오리의 경우 업계의 적극적인 종오리 도태로 인해 종오리 사육마리수가 전년대비 32.5%가 줄어든 11만수, 육용오리 사육마리수는 전년 대비 17.2%가 감소한 1천260만수를 기록하고 있다. 종오리 사육마리수 감소로 인해 9월에서 11월까지 오리고기 공급량은 전년대비 9% 감소한 3만4천801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량 감소로 인해 11월까지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8.5~16.8% 상승한 6천500~7천원(3kg기준)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재고 물량이 일부 소진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종오리 물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의 경우 생산주기가 짧은 만큼 언제 상황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F1종오리의 입식금지

및 적극적인 질병 차단방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08. 29

오리값 다시 하락... 사육수수 유지 만전을

여름철 성수기 수요로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오리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오리협회가 적정사육수수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8월 24일 오리계열업체 및 부화장, 종오리 농장 등에 오리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협회는 우선 검정되지 않고 계통보증서가 없는 종오리의 사육을 중단할 것과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는 절대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능력이 떨어지는 종오리는 조기에 도태시키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수수를 입식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오리고기 소비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리자조금 거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리협회가 이 같이 나선 것은 지난해 HPAI발생 이후 무분별한 입식으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는 “연초에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을 추진해 오리값이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재고가 남아있고 여

름철 이후 오리고기 소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더욱이 오리의 경우 생산주기가 짧아 언제 든지 과잉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적정 사육수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리협회는 오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F1 오리사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불법 오리사육 및 부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08. 29

강진 오리농장주
“잘 살아보려고 귀농했는데..”
태풍에 하우스 폭삭,
오리 4천 마리 유실 · 폐사



“잘 살아보려고 귀농했는데,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막막합니다”

9월 2일 전남 강진군 칠량면 한 오리농장의 귀농인 부부가 제15호 태풍 불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

져 내린 축사를 보며 한숨을 지었다.

이들은 목포에서 조선소 일을 하다 귀농 3년째를 맞은 박운수(44)·양명숙(44)씨 부부.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6월 강진군 칠량면 산 4번지에 오리농장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농장을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2년여 만에 태풍 피해로 가족의 희망이었던 오리 7천 마리 가운데 4천 마리가 유실되거나 폐사해 귀농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씨는 태풍이 몰아친 지난 8월 27일 밤 애초 축사가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과 달리 산을 타고 넘어가지 못하고 몰려 있던 바람이 강풍을 만들어 되돌아 치는 바람에 오리농장 하우스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대부분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던 부부는 냉장고와 밥통 등 각종 살림살이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털 쟁거리자 일단 집으로 피신했다.

오리 걱정엔 한숨도 자지 못한 부부는 8월 28일 오전까지 불어대는 태풍이 오후에 소강상태를 보이자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미 오리농장은 폭탄을 맞은 뒤였다.

살림살이가 든 컨테이너는 뜯겨 도로 밖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었고, 부부의 힘으로 무너진 축사에서 오리를 꺼내기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부부는 강진군에 도움을 요청해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오리 3천여 마리를 뼈대만 남은 축사 1동으로 옮겼다.

이번 태풍으로 전체 7천여 마리 오리 가운데 4천여 마리가 폐사하거나 유실되고, 무너진 축사 등을 포함해 모두 1억~1억5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박씨는 “모든 걸 접고 귀농하면서 2년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잘 살아 보겠다고 앞

만 보고 달려왔다”며 “자연재해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인 양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살아있는 오리에는 우선 사료를 뿌려 먹이고 있지만 폐사하고 유실된 오리가 많아 피해가 크다”고 울먹였다.

한편 강진군은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벌이며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조를 나눠 피해 농가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2012. 09. 02

도심서 키우는 닭·오리 울음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나

서울 도심에서 이웃집의 닭과 오리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와 자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월 3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주민은 이웃집 옥상에서 들려오는 닭과 오리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해당 지역 관할인 동작구가 조사한 결과, 해당 소유주는 2층짜리 주택 옥상에서 닭 12마리와 오리 2마리 등 총 14마리의 가금류를 키워 왔다.

이에 구는 규제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도심에서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웃 주민

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는 “현행 동물 관련 법규상 동물의 울음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리’로 간주돼 규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구 관계자는 “이런 경우 이웃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구청에서 소유주를 만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육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 울음소리는 ‘소음 진동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가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 사육제한 조례’는 소, 돼지 등 큰 가축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구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물복지와 도시농업을 강조해 도심지에서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동물 소음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골머리”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김영주 기자 2012. 09. 03

고병원성 AI 예방...오리 사육농장 예찰 전북, 420만마리 검사

전북도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농장 200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산위생연구소는 최근 중국과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변형인플루엔자(H3N2)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

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종오리 농장 20호, 육용오리 농장 180호에서 사육중인 오리 420만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오리는 AI 사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찰과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류 사육 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양승선 기자 2012. 09. 05

용담1동 ‘정윤이네 오리방앗간’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제주시 용담1동 소재 ‘정윤이네 오리방앗간(대표 최정윤)’은 9월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받았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성욱 팀장은 정윤이네 오리방앗간을 방문해 공동모금회에 기부되는 성금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정윤이네 오리방앗간은 오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식집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된다.

최정윤 대표는 “작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며 “착한가게를 시작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제주 2012. 09. 05

북구,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개선 등 새 단장

부산 북구청은 만덕1터널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만덕민속오리마을의 디자인개선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9월 9일 밝혔다.

오리마을은 30여 년 전부터 오리와 염소요리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형성된 마을로 맛과 수려한 자연경관 덕분에 유명세를 떨쳐왔으나 건물 등 환경의 노후화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지난 1월부터 디자인개선사업 용역 발주,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17일 디자인개선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 9월부터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브랜드 디자인을 비롯해 종합 안내도, 권역 안내판, 업소 간판, 마을 진·출입구 안내판, 마을옹벽 디자인, 마을주차장 정비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브랜드 디자인은 오리 캐릭터와 오방색을 이용한 것으로 친근한 이미지와 전통성을 잘 보여주고 각종 안내판과 업소 간판은 오리의 곡선과 오방색을

결합시킨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종합안내도는 약도 형식으로 만들어 업소를 찾기 쉽도록 했으며 솟대를 함께 설치해 보는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업소 간판은 지주형과 돌출형으로 각각 제작하며 지주형에는 업소명과 주요 메뉴를 표기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업소명과 전화번호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마을옹벽도 오리마을의 새로운 이미지에 걸맞게 변화, 오리마을 로고와 솟대이미지를 배치하고 아래에는 키 작은 식물을 심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의 벽화를 만들기로 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공동주차장의 활용도 확대, 업소별로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방문객이 많은 경우를 대비해 공동주차장의 경사지역을 정비해 공간을 더 확보하고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디자인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오리마을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만덕사지 등 유적 탐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스 강재순 기자 2012. 09. 09

가을철 보양식도 오리고기 ‘으뜸’

무더운 여름철에만 맛보던 보양식은 이제 옛말이다.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지만 맛과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략) 최근에는 삼계탕 등의 닭요리와 함께 몸에 좋은 오리 요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리고기는 다

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허약해진 원기를 보충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에는 오리에 대해 ‘허한 것을 보하고 열을 없애며, 장부를 조화롭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요식업계에서는 닭과 오리만을 주 메뉴 요리로 상품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찹쌀·인삼·대추·은행·마늘·황기·당귀·숙지황 등 열세 가지의 신효한 토종약재들과 인산죽염을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와서 먹으면 진한 국물맛과 함께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조선 나성률 기자 2012. 09. 14

[오리산업] 소비 위축 예견 종오리 과감히 감축 수급 안정 꾀해

올해 상반기는 오리업계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리공급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소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리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오리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준까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이르렀다.

오리산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오리가격은 생산원가 이하에서 형성됐고 수많은 오리 사육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위기가 찾아왔다. 상반기 내내 지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하절기 복 수요를 맞아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가격회복으로 단정 짓기에는 선부른 상황이다.



■ 웰빙 오리 산업

오리 산업은 웰빙 열풍에 맞춰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육류시장에 다양성을 추가하는 형태로 소비가 증가했다.

2005년 대비 2010년 쇠고기 소비량은 31%, 돼지 8%, 닭고기는 42%가 증가한 반면 오리고기는 171%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오리업계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문식당 중심이던 소비 형태를 가정 내 소비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는 대형마트 소비 형태에서도 나타났다. 여름 보양식 매출에 오리가 늘어난 반면 생닭이 감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소비 형태를 비율로 따져보면 오리훈제가 46%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오리구이, 오리탕, 오리찜, 전골 등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건강 기능성 식품을 뛰어넘어 부분육, 즉석조리 식품, 급식용 식자재 등으로 제품이 세분화되면서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 같은 소비활성화와 FMD로 인한 대체 소비 증가로 오리업계는 호황을 누리며 승승장구 상승세를 타고 사육에 몰두해왔다.

■ 오리 산업 현재

오리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포화상태였다. 올해 초 오리 사육수수는 1,309만 수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857만 수보다 52.8%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두 배에 가까운 사육수수 증가를 기록했다. 장기적인 축산물 소비 감소와 더불어 사육수수가 급증해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올해 6월에는 사상 최초로 생산량이 1,000만 수를 넘어섰다. 오리 사육수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오리가격은 약세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6월 중순 생체오리(3kg기준)가격은 4,400원이며 신선육 가격도 500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3%, 35%가 하락했다. 오리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오리업계는 자구책으로 F1입식 근절과 자율도태에 돌입하며 7월 들어 복수요를 타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며 오리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한국오리협회 시세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말 5,900원까지 떨어졌던 오리 신선육(2kg) 산지가격이 7월 중순 8,300원을 형성하며 지난해 동월 평균인 8,409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병아리 가격은 지난달 400원이었으나 7월 들어 800원으로 가격을 회복했다. 수치상으로는 2배나 가격이 뛴 셈이다. 생체오리(3kg 기준) 가격도 6,80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5월말 4,400원보다 2,400원이 상승하며 전체적인 가격회복의 신호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여름철을 맞이해 복수요 증가로 소비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무더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여파가 대체 소비로 이어져 오리입식 증가로 인해 하락했던 오리가격이 7월 들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면서 “하절기 복수요로 인해 가격이 반등한 이유도 있지만 농가들이 가격 폭락에 따라 입식을 자제하고 자율감축에 나선 영향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리업계는 사육수수 증가로 인해 재고가 쌓여가고 가격 폭락으로 위기를 맞이하자 종오리 자율감축으로 가격안정을 취하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무분별한 종오리 입식과 F1오리입식 근절을 위해 앞장서 왔고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리 산업은 생산 주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이 호황을 누릴 경우 사육 수수 증가로 인한 불황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리 사육동향 및 생산액

연도	사육수수	사육가구 수	총생산액(억 원)
1990	1,188,655	14,522	375
1995	2,356,903	9,458	1,536
2000	5,133,511	12,986	4,744
2001	6,715,554	12,845	3,820
2002	7,823,442	11,679	4,750
2003	9,017,280	9,987	4,595
2004	8,265,580	8,484	4,637
2005	8,388,747	8,921	6,490
2006	9,386,190	8,456	6,480
2007	10,513,308	7,184	5,824
2008	9,702,215	5,192	11,544
2009	12,733,275	5,274	12,300
2010	14,397,301	5,126	13,059

■ 오리 산업 미래

오리 산업은 지금껏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급속성장으로 인한 전후방 산업의 부재와 짧은 생산 주기로 인한 수급불안정이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오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의 전반적인 정비와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산업 정비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해 산업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연이은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나 세계 최대의 오리 생산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FTA 체결시 중국의 육용오리 생산비는 수당 2,166원으로 우리나라의 6,182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피해액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축산 환경 시설 재정비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더불어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오리산업의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연구지원과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오리의 육종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에 집중투자해 정밀 사육프로그램개발, 사육환경 개선 연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리 사육은 육계처럼 계열화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는데, 육계의 계열화 방식만큼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구노력 끝에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오리산업은 규모화와 계열화가 자리 잡은 것에 반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산업의 수직성장만을 지속해 왔다.

이제 오리업계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산업 제 2의 도약을 위해 후방산업의 재정비 등 산업 발전을 거스르는 약점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낸다면 오리 산업은 잠재력만 있는 산업이 아닌 축산업을 주도하는 주요축산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경제 이혜진 기자 2012. 09. 14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 완화

내년 2월부터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농가는 축사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허가 기준만 갖추면 축산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이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7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축업과 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내년 2월부터 즉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 2013년에는 전업규모 2배 수준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규모,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산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 4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대상 축종은 기존 4개(소·돼지·닭·오리)에서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등을 추가해 총 11개 축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의무교육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허가 기준만 갖추면 축산업을 허가해 주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이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축산경제 한정희 기자 2012. 09. 14

전북 축산농가 “도 과잉규제 너무해”

전북도가 축산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가축사육 금지 구역을 설정해 축산농가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위치기준(제한거리)을 신설해 축종 및 사육마릿수별 거리제한 규정을 명시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가 신규로 축사를 지을 경우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의 경우 사육마릿수 50마리 이하의 주거지 반경 50m, 100마리 이하의 70m, 200마리 이상은 1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돼지도 2천마리 이하의 180m, 3천마리 이하의 250m, 3천마리 이상은 320m로 제한했다. 닭과 오리는 6만 마리 이하의 180m, 9만마리 이하의 250m, 9만 마리 이상은 320m로 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4월 도내 14개 시·군과 새만금 수질대책 회의를 갖고 농식품부 시행령보다 3~10배 강화된 가축사육 금지 구역 준칙안을 제시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는 소의 경우 10가구 이상 집단을 이룬 주거지의 반경 500m 이내에서 5마리 이상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돼지는 주거지 반경 2km 이내에서 5마리 이상, 닭과 오리는 1km 이내에서 20마리 이상 사육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도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 내 행정구역 70~80%에서는 신규 축산농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북도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과다하게 설정해 전국에서 신규 축산농가 진입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내 일선 시·군의 조례가 상충할 것에 대비해 법규해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임송학 기자 2012. 09. 19

충남도 '구제역·AI 예방' 축산 전문가 한자리에

충남도는 9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축방역 협의회를 열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는 10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도내 축산 관련 전문가 17명이 참석해, 구제역 재발 방지 및 AI 청정화 유지 대책을 점검했다.

또 축산 농가 전화예찰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각 기관별 방역상황을 살피고, 각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도축 출하를 못하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수매 등 정부 피해 보상 건의 방안도 논의됐다.

박영진 도 축산과장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내달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 방역기간을 앞두고 방역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긴급회의 등을 통해 도내 가축 방역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과 AI가 동시 발생해,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 피해액만 1,499억원에 달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2012. 09. 18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첫 3kg 돌파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3kg을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오

리고기 소비량은 총 17만137톤으로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3.134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량이 3kg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2010년 2.445kg보다 28%가 증가한 것이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09. 19

서울시, 추석맞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형쇼핑센터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단속반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75명, 25개 조로 구성되며 약 125개의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메뉴판에 게시된 원산지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냉장(동)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등이다.

점검 대상인 음식물은 소·돼지·닭·오리고기 등 육류, 납치·조피볼락·참돔·미꾸리지·뱀장어·낙지 등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seoul.go.kr)에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며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2012. 09. 19

청양군, 가축 HACCP 농장지정 등 친환경축산 선도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양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가축 사육단계 HACCP 농장 지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을 위한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 등 친환경축산 기술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9월 20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한우 사육농가 9농가가 시범 참여해 전농가가 HACCP 농장 지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

증을 획득, 청양군 친환경 축산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청양군에는 가축 사육단계 HACCP 지정농장 20개소(한우 12, 양돈 3, 양계 5),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42개소(한우 30, 양계 9, 오리3)의 농장이 있다.

가축사육단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을 말한다.

또 친환경 축산물이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구분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을 가리킨다.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에서 6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한상남(54)씨는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사 환경이 깨끗하고 소도 잘 커서 사료 효율도 높아지고 질병발생이 적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전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축산업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과학축산을 선도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비용절감으로 축산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군, ‘동물복지형 축산’ 지원 팔 걷는다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친환경축산 인증목표를 324농가로 설정, 농가교육과 함께 인증가능 농가 현지독려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은 한미 FTA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친환경축산 농가를 확대해 선진 축산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신규농가 인증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해 농가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재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100% 인증수수료를 부담해주고 있다.

올해 확보한 예산도 모두 2억4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7천9백만원보다 3배나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군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에 6천2백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5천만원,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에 3억6천9백만원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친환경축산이 경쟁력이 있다. 친환경축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축산농가는 한우와 젓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산양 등 모두 2,800여 농가다.

축단협, 축산분야 18대 대선공약 집약 요구키로

축산단체협의회, 대표단·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본격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윤곽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여야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과 수용을 요구할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업계의 숙원 사항과 현안 문제, 정책 과제 등을 협의했다.

축단협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업계의 바람과 여론, 시급한 현안과 절실한 정책 과제 등을 범축산계 차원에서 수렴 및 발굴하고 집약해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축산인 단체 대표 7명, 농업인 단체 5명, 농·축산 학계 1명 등 1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의견 개진을 거쳐 김남배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장, 이병모 한국한돈협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정병학 한국계육협회장, 김광수 한국단미사료협회장,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등 7명을 대표단 구성원으로 선임하고 실무추진반을 축산부문과 농업부문으로 대별해 구성, 9월 25일부터 연석회의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업계의 현실과 기상악화에 따른 자연재해 추이, 국제곡물가격 급등, 전방위 FTA 추진, 국내 주요 가축사육 마리 수 과잉 및 축산물 소비 침체 등을 고려해 대선공약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제 곡물가격 급등 대처, 식량 자급률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도·농 동반성장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한편 축단협은 대선공약 관련 대표단 및 실무추진반이 수렴 및 발굴하고 집약할 사항과 세부 내용은 대통령 당선인 확정 후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때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12. 09. 21

전북, 오리농장 전수 조사 시 '음성'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9월 27일 도내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농장 전체(176호)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9월 3~26일 도 축산위생연구소 질병 진단팀 30여 명이 오리농장에서 채취한 분변과 혈액, 종란 등의 시료를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올 1, 2분기에도 종오리 농장 41호와 육용오리 농장 316호 등 가금류 농장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는 AI 발병 위험시기인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 및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사시 대응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지난해 1월 고창 메추리 농가에서 AI가 발병한 후,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종환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최근 미국에서 변형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증가하고 중국, 홍콩, 캄보디아, 멕시코, 남아공 등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축산당국이나 축산위생연구소(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권철암 기자 2012. 09. 27

오리인증제사업, 연내 추진계획

한국오리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산 오리인증제 사업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2012 국내산 오리인증 CI 및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오리 도압장 및 계열·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산 오리인증제 사업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오리고기 수입량 증가에 대비해 국내산 오리고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오리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리인증제 사업은 대외적으로 한·중FTA를 앞두고 국내 오리산업을 보호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기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F1오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급 조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업계 논의를 모아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 09. 24

